

# [AI로 퀀텀점프]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韓 경제, 저성장서 빠져나갈 기회...AI 성장 모멘텀 될 것"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대 전망  
미중 관세전쟁 불씨 여전...국력 키워야

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 입력 : 2025-11-13 08:02 | 수정 : 2025-11-13 08:02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4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가 저성장 덩어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이며 인공지능(AI)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지금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덩어리로부터 빠져나갈 기회"라며 "인공지능(AI)이 시대적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이 2~3%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올 성장률은 1%대를 기록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경제 흐름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AI가 한국경제 성장엔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아울러 AI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고, AI 발전으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다음은 전광우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올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이를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으로 보나.

A. 올 3분기에 1.2%의 '깜짝 성장'을 보이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한은의 추정은 4분기에 -0.1%보다 나쁘지 않으면 올 한 해 1%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앞서 한국 성장률 전망을 0.8%에서 0.9%로 올려잡았고, 국제적 IB(투자은행) 평균 예상도 1%인 만큼 현재 분위기로는 1%대 성장 가능성이 커졌다.

Q. 한국의 성장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고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A.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의 기본 체력이다. 이것이 지난 수년간 지속 추락했다는 점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다. 잠재성장률의 결정 요인인 노동생산성과 기술경쟁력, 자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때 견고한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노동생산성이 큰 걸림돌이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절실한 이유다. 또한 기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혁신산업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고,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Q. 한국이 다시 '성장 국가'로 복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A. 전반적 경제 추세를 보면 한동안 미국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으나, 인플레이와 성장 모두 관찮은 그림으로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고관세 충격과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혁 와중에도 세계경제가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가. 대외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으나 3분기 성장만 해도 대만 7%대, 싱가포르 3%대를 기록했듯이 우리가 외부 환경 탓만 할 수는 없다. 즉 기회를 잘 포착하면 저성장의 뒷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AI 혁신이 저성장 고착화 반전의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Q.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GPU 한국 공급 등이 이슈가 되면서 한국이 피지컬 AI를 적용하기에 최적화된 나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AI 대전환은 어떤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나.

A. 현재 글로벌 AI 경쟁 속에 AI 모델 개발의 핵심 요소인 GPU(그래픽처리장치) 수요는 초과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젠슨 황 CEO의 한국에 GPU 26만 개 공급 계획 발언은 우리에게 큰 호재다. 그의 선택에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엔비디아도 AI 칩 생산능력을 가진 한국 기업과의 분산 투자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우리에게 찾아온 AI 발전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면 관련 인프라 강화, 특히 데이터센터 확충에 필수적인 전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각국이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이며, 우리 정부도 간과해선 안 될 시급한 과제다. 민·관·정이 하나로 뭉쳐 'AI 강국 건설'이라는 시대적 비전에 동참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다.

Q.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걸고 투자 확대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 규모와 시기를 어떻게 평가하나.

A. 국가부채 증가는 전 세계가 당면한 현상이자 도전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수준으로 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기축통화국 등 선진국의 부채 문제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특히 우리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이 일관되게 제기해 왔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의 경기활성화 '마중물' 역할은 필요한 때로 평가하되, 재정건전성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재정지출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AI 인프라 구축 예산 배정은 오히려 부족한 느낌이고, 건설업 회복 등 파급효과가 큰 대상에도 높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반면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 등은 절제하는 것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Q. AI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다. 기술혁신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성장모델이 필요하다고 보나.

A. AI가 성장 촉매제가 되고 수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많지만, AI가 한국경제의 주류로 자리 잡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 첫 번째가 노동시장 양극화다. 효율성이 높아지면 노동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예상되는 현상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고숙련이 필요한 산업은 인간의 노동력이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그 중간층 인력이 투입되는 분야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재교육 등을 통해 기술환경 변화에 적응하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내 경제·산업의 구조적 불균형도 과제다.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챔피언 기업'을 키워야 하는 측면도 있으나, 자칫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다.

Q. 내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은.

A. IMF, OECD 등 국제기구나 평가기관들의 내년 한국 성장 전망은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국제금융계에서 AI 거품론도 제기되지만, 당분간 AI발(發) 초호황기—즉 큰 흐름에서 'AI 슈퍼사이클'의 지속—가 대세라고 볼 때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일각에선 근 2% 성장률을 내다보는 긍정적 예상도

있다. 다만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정책 적법성 판단 등 정책 불확실성, 미·중 갈등과 글로벌 지정학적 변수 등 하방 리스크에 유념해야 한다. 앞서 미·중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일종의 '휴전'에 합의했으나 관세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긴장의 끈을 놓을 때가 아니라, 높은 정치·경제적 도전의 파고를 헤쳐 나갈 국력을 키워야 할 때다.

김유진 기자(ujean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